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활동 차단,
탄력근로제 개악, 장시간 노동 강요 ...

금속노조 파괴하는 악법이 몰려온다!



청와대·국회·자본 합작 ‘노조파괴 도미노’ 노동법 개악에 여야가 따로 없다

대체인력 투입 무제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사용자단체 요구 적극 반영하여 ‘노동조합 무력화’ 법안 쏟아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 운운하며 ‘노동조합 무력화’의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종 ‘노조파괴법’을 발의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관청이 노동조합

을 해산할 수 있는 법안까지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동개악법안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들로, 모두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



‘공짜야근법’ 탄력근로제 더 나쁘게 … 최저임금 · 생명안전제도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하고 공짜 야근, 과로사 부추기는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려고 안달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6개월도 짧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1년까지 늘려야 한다며 폐쇄고 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에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

최저임금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라 차별적용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정부와 사용자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급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임금인상은커녕 오히려 임금 삭감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후퇴

사용자단체들이 화학물질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산재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한 해 2천4백여 명에 이른다. 기업 제재와 사용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작업중지 명령지침’ 내용을 후퇴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제도를 계속 개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법,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할 수 없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전부’는 물론 ‘일부’도 접거할 수 없다”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결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개악안이 통과하면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쟁의행위를 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피켓팅, 대체인력 투입 감시활동 등 현행법이 인정하는 쟁의수단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사업장 정문 앞, 공장 담벼락에서 지회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

직장폐쇄가 일상화되고,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침해받는다. 사후 가처분 등에서 사용자의 과도한 제한으로 밝혀지더라도 쟁의권 침해는 볼 보듯 뻔하다.

산별노조 활동 차단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노사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사업장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정부 입법안은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구분하여 조합 활동을 차별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측은 산별노조 간부 출입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밀 것이다.

지금은 금속노조 위원장이나 지역지부장이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을 위해 금속노조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매번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장기간 무교섭 상태를 원하는 자본가들의 소원 수리 법안이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소수노조가 아니더라도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고스란히 노동조합의 단결력, 교섭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소수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 제도를 유지한 채 단협 유효기간까지 연장하면 노동조합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다. 단체교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활동이 원천적으로 박탈, 차단당한다.

우리 사장님
허락없이
금속노조는 못들어와.
개져!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당-자한당, 11월말~12월초 노동법 개악 처리 예상 ...

금속노조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개

민주노총이 11월 9일(토) 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조합원 참가 조직을 선언했다.

노동자착취법과 노조파괴법이 물려오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서울에 모여 금속노동자의 분노와 요구를 정부, 자본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는 10월 14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산별노조활동 제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노동법 개악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11월 말~12월 초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정부의 노동탄압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저지

아울러 금속노조는 잇단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동인권단체 등과 함께 10월 7일 '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 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중단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명운동, 23일 상경집회, 29일 국회 증언대회 등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집중투쟁을 펼친다.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비정규직 철폐 · 사회공공성 강화 · 재벌체제 개혁

민주노총·금속노조 하반기 투쟁 계획

